

# 예멘 統一의 問題點

國內學術會議 發表論文集

1994. 5. 17

民族統一研究院

## 序 文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에 부응하여 남·북예멘은 지난 90년 5월 22일 군사적 대립과 분단상태를 청산하고 역사적인 統一過渡政府를 樹立한 바 있으나, 통일 이후 야기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근 全面內戰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으며, 급기야는 금번 5월 21일 南예멘이 分離, 獨立宣言을 하여 再分斷의 危機에 처하게 된 실정이다.

‘한민족공동체안’에 의거하여 점진적, 단계적 통일방식을 추진해 온 우리로서는 정치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 예멘 兩側의 平和的 合意에 의한 統一政府 樹立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왔었지만, 애초 우리의 期待와는 달리 통일이예멘은 끝내 政治·軍事的 統合에 이르지 못하고 再分斷의 상황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예멘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示唆點과 教訓은 여러가지 次元에서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당 연구원은 “예멘統一의 問題點”이라는 主題로 제12회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보고서는 발표논문들과 토론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일부논문은 저자가 토론내용을 감안하여 補完하였으며, 토론내용도 책으로 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편집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의 통일방안 개발과 통일연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4. 5.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조정실

— 目 次 —

序 文

開 會 辭 .....	李秉龍 ... 1
I. 會 議 .....	3
1. 예멘 統一方式이 한반도 統一에 주는 示唆點 ..... 金國新(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 5	
2. 예멘統一 이후 問題點 — 政治·軍事 問題點을 중심으로 ..... 柳志鎬(前 예멘 駐在大使) ... 33	
II. 綜合討論 .....	57
〈附錄〉會議日程 .....	82

## 開 會 辭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예멘統一의 問題點』이라는 주제로 제12회 國內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발표자·토론자·사회자로 참여하여 주신 학자·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公私多忙하신 중에도 이 學術會議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歡迎하며 감사드립니다.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독일에 이어 1990년 5월 22일 남북예멘이 대결과 반목을 청산하고 合意統一을 이룩함에 따라 지구상에 유일한 냉전분단국으로 남게 된 한반도에도 統一의 가능성과 함께 예멘식 統一方式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로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예멘이 평화적으로 정치통합을 달성한 것은 합의에 의한 漸進的·段階的 統一政策을 견지해 온 우리의 경우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예멘통일후 발생하는 각종 問題點 해결방식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동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태의 진전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통일 4주년을 맞이하는 예멘은 통일이후 야기된 經濟難, 남북 정치지도자들의 不和와 社會混亂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內戰狀態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國民的 合意와 相互信賴構築이 이룩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경제적 편의에 의하여 성급하게 통일을 시도하는 경우 성공할 수 없다는 敎訓을 우

리에게 깨닫게 해준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저희 연구원은 예멘의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問題點을 分析하고 예멘 통일방식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示唆點을 導出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의 統一政策 樹立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討論의 場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사계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고 진지하게 고견을 교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개최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994. 5. 17

民族統一研究院

院 長 李 秉 龍

# I. 會 議

빈 면

# 예멘 統一方式이 한반도 統一에 주는 示唆點

金 國 新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 〈 목 차 〉

- |                   |                    |
|-------------------|--------------------|
| I. 序 論            | V. 예멘統一 以後 問題點     |
| II. 예멘分斷의 歷史的 背景  | VI. 南北韓 統一에 대한 示唆點 |
| III. 南北예멘 發展樣相 比較 | VII. 結 論           |
| IV. 南北예멘의 統一 過程   |                    |

## I. 序 論

동서독이 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정치적 통합을 준비하고 있을 때인 1990년 5월 22일 예멘통일이 선포되었다. 같은 분단국으로 고통을 겪어 온 우리는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다. 한국보다 경제력이 월등한 독일이 통일 후 심한 사회·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본 일부 지식인들은 獨逸式 吸收統一보다 예멘式 合意統一이 남북한 통일에 더욱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러나 통일 4주년을 맞게 되는 현재 예멘은 남북예멘 출신 정치인들 간의 불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전면적인 내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통일예멘의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예멘통일방식을 재평가하게 만들며 통일에 관한 우리의 인식을 재고찰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 논문은 남북예멘 분단상태의 특성, 통일협상과정 및 통일 이후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멘統一方式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먼저 남북예멘이 분단하게 된 역사적 배경부터 통일 이후 문제점까지 예멘통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남북예멘과 남북한의 類似點과 相異點을 비교하여 예멘통일이 남북한 통일에 주는 교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 II. 예멘分斷의 歷史的 背景

예멘은 1538년부터 1636년까지, 그리고 1871년부터 1918년까지 두번에 걸쳐 오토만 터키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오토만 터키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간 예멘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紅海에 인접한 전략적 위치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경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1839년 영국은 아덴을 점령하여 영국의 인도 植民地政府의 관할하에 두고 인도양 진출의 거점으로 이용하였다. 당시 아덴을 제외한 남예멘지역은 20여개의 독립적인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영국은 1882년부터 1914년까지 이들 회교 군주국들과 차례로 保護協定을

체결하고 식민통치를 실시하였다.<sup>1)</sup>

## 1. 北예멘 獨立과 共和國 樹立

1918년 자이드 부족의 이맘<sup>2)</sup> 야히야는 북예멘 해안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터키군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로 철수하자 사나를 수도로 하여 回教 君主國을 수립하였다. 이맘 야히야의 봉건적인 통치하에서 북예멘은 정치·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였다. 1948년 이맘 야히야가 정치·사회적 개혁을 요구하는 지식인들에 의해 암살되자 야히야의 아들 아마드는 북부 部族勢力의 지원을 받아 개혁세력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맘직을 승계하였다.

이맘 아마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아랍지역에서 개혁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외국문물에 대한 제한된 開放政策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맘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북예멘에는 근대적 산업시설과 교육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1960년에 접어들어 이맘 정부의 전제적 통치에 염증을 느낀 민중들이 반정부 시위를 전개하자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젊은 장교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王政을 붕괴시켰다.<sup>3)</sup> 군사혁명정권은 1962년 9월 26일 예멘아랍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1970년까지 8년간 王政派와 내전을 겪게 되었다.

---

1) Robin Bidwell, *The Two Yemens*(Boulder: Westview Press, 1983), pp. 48~53 참조.

2) 이맘은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이슬람 시아파는 이맘을 神聖한 존재로 추앙하며 이맘에게 정치적 권력을 부여한다.

3) Manfred W. Wenner, *The Yemen Arab Republic: Development and Change in an Ancient Land*(Boulder: Westview Press, 1991), pp. 131~132 참조.

## 2. 남예멘 獨立 過程

1937년 영국은 아덴을 영국정부의 직접통치하에 두고 무역 중개항으로 근대화시켰다. 그러나 아덴을 제외한 남예멘 內陸地域은 영국의 印度 植民地政府의 간접통치를 받으며 술탄과 부족장의 지배하에 전통적 사회구조와 관습을 그대로 보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랍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남예멘에서도 영국통치에 대한 반항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영국 식민정부는 입법평의회를 설립하고 예멘인을 입법평의회 의원으로 임명하는 등 제한적인 民主化 措置를 실시하여 예멘인들의 식민정부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입법평의회 선거를 둘러싸고 예멘인들이 정치화되어 가는 가운데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아랍민족주의 좌파계열의 영향을 받은 남예멘 내륙지역 학생들과 혁명적 지식인들은 북예멘에서 共和國이 수립되는 것을 계기로 북예멘 수도 사나에서 1963년 6월 무장투쟁 단체인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였다.<sup>4)</sup> 민족해방전선은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면서 급속히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대하였다. 1965년 민족해방전선은 아덴노동조합의 지지를 획득하여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1967년 11월 30일 민족해방전선은 영국과 독립협정을 체결하고 남예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

4) Helen Lackner, "The Rise of the National Liberation Front as a Political Organization," in B. R. Pridham, ed., *Contemporary Yemen: Politics and Historical Background*(London: Croom Helm, 1984), p. 50 참조.

### Ⅲ. 南北예멘 發展樣相 比較

#### 1. 北예멘

공화국 수립 당시 북예멘의 정치체제는 형식상 이슬람교의 원리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입헌공화제였다. 그러나 정부의 실질적인 권력은 이집트의 군사혁명정부를 모방한 혁명지도회의가 장악하고 있었다. 군사혁명정부는 목화, 섬유, 시멘트 생산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國有化하거나 정부와 민간인이 합작투자로 운영하는 반면 영세한 규모의 공장과 수공업에 대해서는 민간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였다. 公共經濟와 민간경제를 혼합한 混合經濟體制가 북예멘 경제정책의 기본이념이 되었다.

1967년 쿠데타를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이리아니는 1970년 사우디 아라비아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王政派 온건계열과 聯立政府를 수립하였다.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勢力均衡에 의해 유지된 이리아니 정권은 과감한 사회·경제 개발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1974년 함디 중령이 주도하는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붕괴되었다. 함디는 국정운영의 최고기관으로서 군사평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保守的 部族長들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문회의를 해체하였다. 함디는 민주화 조치와 개혁정책으로 국민들의 인기를 끌게 되었지만 보수파와 부족세력의 반발을 초래하여 1977년 10월 11일 보수세력에 의해 암살되었다.

함디가 암살됨에 따라 가쉬미 중령이 군사평의회 의장직을 승계하였다. 가쉬미의 保守的 政策으로 남북예멘관계가 긴장되어 가는

가운데, 1978년 6월 가쉬미는 남예멘 루바이 알리 대통령의 특사와 면담 중 특사의 가방에 든 폭탄의 폭발로 사망하였다. 가쉬미가 암살되자 살레 중령이 軍의 지지를 받아 1978년 7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살레가 집권한 직후 南部地域에서는 반체제 단체인 민족민주전선이 남예멘의 지원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sup>5)</sup> 1979년 2월 남예멘 군대는 민족민주전선을 지원하기 위해 북예멘을 침공하였으나 남북예멘은 곧 平和協定을 체결하였고, 민족민주전선의 반란은 진압되었다. 민족민주전선의 반란을 진압한 이후 살레정권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다.

1970년대 북예멘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은 해외 근로자들의 送金이었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에 취업한 해외 근로자는 약 백만명에 달하였으며, 약 17억 달러에 이르는 이들의 送金額이 북예멘 GNP의 40%를 차지하였다.<sup>6)</sup> 해외 근로자들이 보내준 송금으로 소규모의 상점과 건축업체들이 번성하면서 북예멘에서 資本主義 초기 형태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살레 대통령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1982년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82년부터 세계적인 經濟沈滯의 영향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및 국제기구 등으로 부터 원조가 줄어들고 해외 근로자들의 送金이 감소하였다. 경제적 위기를

---

5) Richard F. Nyrop, *The Yemen Country Studies: Area Handbook Seri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5), p. 194 참조.

6) J. E. Peterson, *Yemen: The Search for a Modern State*(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p. 17 참조.

겪게 된 북예멘 정부는 1984년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1985년 남예멘과 國境地帶에 위치한 마립 지역에서 石油가 발굴되자 북예멘 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북예멘은 1987년 말부터 석유를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석유생산 덕택으로 북예멘 경제는 1980년대를 통하여 연 평균 6%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1988년 1인당 GNP는 약 650 달러에 달했다.<sup>7)</sup>

살레 대통령의 장기집권으로 지도체제가 一貫性을 띠게 되고 석유개발로 국가의 財政이 강화됨에 따라 1989년 말 북예멘 정부는 부족세력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의존도는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살레 대통령은 통일을 반대해 온 보수적 부족세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증대되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였다.

## 2. 南예멘

1967년 독립을 선포한 후 민족해방전선은 명칭을 민족전선으로 바꾸고 민족전선의 서기장 알샤비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후 민족전선은 정책노선을 둘러싸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되었다. 權力鬭爭이 치열해지자 루바이 알리를 중심으로 한 強硬派들은 1969년 6월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알샤비 대통령을 퇴진시켰다. 루바이 알리는 1970년 11월 새 헌법을 공포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강

---

7) 통일전 남북예멘 발전상태 비교는 李定裁, “예멘 그 統一의 論理와 當面 諸問題,” 『北韓』, 통권 244호, 1992년 4월, pp. 86~99 참조.

화하였다. 남예멘 정부는 1970년대 말까지 産業施設의 절반 정도를 국유화하고, 農地의 80%를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의 소유로 만들었다.<sup>8)</sup>

1975년 소련과 남예멘 관계가 더욱 밀착되어 가는 가운데 민족전선은 2개의 소규모 정당을 통합하여 ‘민족전선통합정치조직’이라는 單一政黨을 설립하였다. 그후 당내 教條主義者들은 세력을 확장하며 親中共派인 루바이 알리를 타도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1978년 6월 24일 북예멘의 가쉬미 대통령이 폭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이스마일을 중심으로 한 親蘇派는 쿠데타를 일으켜 루바이 알리를 처형하였다.

1978년 10월 이스마일은 민족전선통합정치조직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예멘사회당을 설립하고 당과 정부기관의 서열을 소련식으로 규정하였다. 1979년 북예멘과 전쟁을 치룬 이후 주변 아랍 국가들의 원조가 중단되었지만 소련으로부터 경제원조가 기대했던 만큼 증가하지 않자 黨과 정부의 실용주의자들은 이스마일의 親蘇 強硬路線에 불만을 표시하게 되었다. 실용주의자들이 알리 나셀 총리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이스마일 중심의 지도체제를 잠식하자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이스마일은 1980년 4월 소련으로 망명하였다.

1970년대 말 남예멘 勞動力의 약 15%인 85,000명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이 GNP의 약 70%를 차

---

8) Tareq Y. Ismael and Jacqueline S. Ismael,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The Politics of Socialist Transformation*(London: Frances Pinter, 1986), p. 86 참조.

지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9)</sup> 남예멘 정부는 해외 근로자의 송금을 관리하며 산업성장을 유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해외 근로자의 증대와 더불어 기술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러한 노동력 부족현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저임금을 받고 취업하려고 하지 않음에 따라 더욱 심각해졌다.

실용주의자인 알리 나셀은 사우디 아라비아 등 주변 아랍국가들의 원조를 받아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1982년 세계적인 油價 하락으로 아랍국가들로부터의 원조는 증가하지 않은 반면, 해외 근로자들의 送金은 크게 줄어 들어 남예멘 경제는 더욱 침체되었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권력투쟁이 재개되어 親蘇 強硬派들이 국방장관 등 정부요직에 복직되었다.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알리 나셀은 1986년 1월 13일 당내 반대파들을 기관총으로 사살하고 그의 고향으로 피신하였다. 알리 나셀은 부족세력의 지지를 받아 군부의 지원을 받은 강경파들과 2주간 동안 무력충돌을 벌였으나 내전에 패배하여 2만여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북예멘으로 피신하였다.

알리 나셀을 추방한 후 당과 정부의 젊은 관료와 군부는 集團指導體制를 형성하고, 1986년 2월 알아타스와 알비드를 각각 최고인민회의 간부회의장과 예멘사회당 書記長에 추대하였다. 알아타스 정권은 1986년 10월 최고인민회의 111명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여 正統性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정부가 행정경험이 부족한 젊은 관료들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는 쉽

---

9) Ismael,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 p. 5 참조.



게 회복되지 않았다.

남예멘 정부는 1986년 제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1986년 내란으로 GNP의 약 10%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달러의 經濟的 損失을 입게 되어 제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1980~1988년 사이에 남예멘의 GNP는 연평균 3.2%씩 감소하였고 1인당 GNP는 5.9%씩 감소하여 만성적인 식량·의약품·소비재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던 남예멘 경제는 소련의 經濟援助가 1989년에 4억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감소함에 따라 심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sup>10)</sup>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정책으로 지금까지 남예멘을 지탱해 온 정치·경제적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느낀 남예멘 지도층은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예멘에서 개방·개혁 조치가 실시되던 중 북예멘 대통령 살레가 頂上會談을 위해 1989년 11월 아덴을 방문하였다. 아덴 시민들이 살레를 열렬히 환영하며 통일을 외치게 되자 남예멘에서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각한 남예멘 지도층은 통일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남예멘 지도층 내의 강경파들은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하였으나 결국 지도층 다수는 북예멘 인구의 1/4 밖에 되지 않은 남예멘이 통일정부의 관료직을 북예멘과 동등하게 분배한다는 원칙에 만족을 표시하고 통일을 지지하였다.<sup>11)</sup>

---

10) Siobhan Hall, *Yemen: The Politics of Unity*(London: Gulf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October 1991), p. 13 참조.

11) Charles Dunbar, "The Unification of Yemen: Process, Politics, and Prospects," *The Middle East Journal*, vol. 46, no. 3 (Summer 1992), pp. 456~476 참조.

### 3. 綜合 評價

남북예멘의 정치발전 양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북예멘의 정치권력은 공화파와 왕정파가 聯立政府를 수립한 이후 다양한 정치집단의 세력균형하에 유지되었다. 보수적인 부족세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약하여 정부의 정책이 지방에 까지 침투되지 못하였고 정권의 변동은 부족세력의 지지에 따라 좌우되었다. 그러나 정부 권력은 군부, 행정관료 그리고 부족세력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 일인에게 점차 집중되었고 一人 獨裁體制下에 정치적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남예멘은 정치권력을 당과 국가기구로 집중화시키고 비교적 일관성있는 官僚體制를 통하여 사회세력을 잘 통제하였다. 그러나 지도층 내부는 친소파와 친중공파 또는 교조주의자와 실용주의자 등으로 분열되어 파벌싸움이 계속되었다.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비효율성과 지도층 내부의 權力鬭爭은 결국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남북예멘은 정치이념과 권력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체제의 실질적인 운영면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보였다. 남북예멘 정부는 社會集團에 대한 統制力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양국 모두 재정적으로 자립능력이 결여되어 해외원조 없이는 경제정책을 실시할 수 없었다. 남북예멘은 體制維持 能力의 취약성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행태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보였다. 양 체제 모두 권력은 소수 집권자에 집중되었고 집권자는 개인적 유대와 부족적 충성심에 의존하여 정권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정권교체는 선거를 통해 民主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신 암살이나 쿠데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표 1〉 統一前 南北예멘 比較<sup>12)</sup>

구 분		南 예 멘	北 예 멘
일 반 현 황	국 명	예멘인민민주주의 공화국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	예멘아랍공화국 (Yemen Arab Republic)
	인 구	248만명	950만명
	면 적	336,869km <sup>2</sup> (한반도의 1.5배)	194,250km <sup>2</sup>
	수 도	아 덴(Aden)	사 나(Sana'a)
정 치	정 체	사회당독재의 중앙집권제	대통령중심의 입헌공화제 (군사독재군사)
	특 징	부족제 없음	부족제 상존
	군사력	27,500명	36,500명
경 제	특 징	국가통제 경제체제	자유시장 경제체제
	GNP	10억\$( '87)	64.5억\$( '88)
	1인당 GNP	420\$( '87)	682\$( '88)
	화 폐	Dinar	Rial
사 회 · 문 화	종 교	이슬람교 (수니파 91%, 시아파 일부)	이슬람교 (시아파, 수니파)
	교 육	문맹율 30%	문맹율 70%
	특 징	○ 술집 등 유흥장 허용 ○ 남녀평등, 1부 1처제 (2처허용) ○ 뇌물수뢰 등 사회적 부패 비교적 없음	○ 유흥장 불허 ○ 남녀불평등, 1부 다처제 ○ 뇌물수뢰 등 사회적 부패 만연

〈자료〉: 統一院 「예멘 統一過程과 部門別 統合實態」(서울: 統一院, 1991) 참조.

12) 남북예멘 정부도 人口 및 경제지표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軍事力에 관해서는 정부의 공식발표 숫자와 실제적인 군병력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북예멘에 관한 통계수치는 자료의 출처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남북예멘의 경제 또한 실질적인 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였다. 북예멘의 經濟理念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였고 남예멘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북예멘 경제는 사실상 공공경제와 민간경제가 양립한 混合經濟體制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한편 남예멘은 물적·인적 자원의 결여로 경제계획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여 산업시설의 절반 정도가 국유화되었지만 나머지 반은 민간경제에 의해 운용되었다. 따라서 남북예멘의 經濟體制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예멘의 사회상을 비교하여 보면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주민들의 생활양식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북예멘에서는 부족간의 대립이 정치화되어 社會統攝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사회계층간의 전통적인 위계질서가 지속되고 있었다. 한편 남예멘에서는 부족장과 술탄 등 전통적 지배계급이 타도되어 부족세력이 脫政治化되었고 사회계층간의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상에 따라 사회구조를 재편성하려는 남예멘 정부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남예멘 정부는 종교활동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강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이슬람교를 國敎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전통적 문화와 생활양식을 제거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는 部族的 紐帶와 忠誠心이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남북예멘의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양식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IV. 南北예멘의 統一 過程

남북예멘은 독립을 달성한 이후 각기 소련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 남예멘은 3만명 정도의 군대를 유지한 반면 북예멘은 3만 6천명 정도의 군대를 유지하였다. 남북예멘은 小數의 兵力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대한 지역에 걸친 국경선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왕래를 통제할 수 없었다. 이같이 남북예멘은 무력통일을 달성할 만한 군사력을 갖지 못한 반면 국력의 격차가 크지 않고 社會·經濟的 同質性이 상당한 정도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에 따라 통일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예멘은 평화공존기간 중에도 상호 불신을 제거하지 못하였고 통일협상은 장기간 空轉을 거듭하였다.

##### 1. 第1期 協商過程 (1972~1978)

1970년 공화파와 왕정파가 연립정부를 수립한 후 북예멘은 남예멘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남예멘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武裝集團을 지원하였다. 이들 무장집단이 國境地帶에서 남예멘 군대와 산발적인 무력충돌을 하는 가운데 남북예멘간에 적대감이 고조되어 1972년 9월 대규모 국경충돌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남북예멘 어느 한쪽도 일방적 승리에 의한 무력통일을 이룩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리비아 등 아랍연맹이 휴전을 중재하자 남북예멘은 곧 이들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1972년 11월 26~28일 북예멘의 이리아니 대통령과 남예멘의 루바이 알리 서기장은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統一原則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8개 분과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sup>13)</sup> 그러나 트리폴리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해 북예멘의 보수세력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심한 반발을 보였다. 部族長과 종교 지도자들은 트리폴리 협정의 비준을 거부하는 한편 사우디 아라비아는 부족장과 군장교들을 사주하여 統一反對運動을 전개하게 하였다. 북예멘에서 정치적 혼란이 거듭됨에 따라 통일에 대한 합의사항은 백지화되었다.

1977년 2월 남북예멘은 국경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합동각료회의를 설치하여 6개월마다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1977년 10월 11일 함디는 頂上會談을 위해 아덴으로 출발하기 전날 암살되었다. 함디에 이어 정권을 장악한 가쉬미가 보수적 부족세력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자 남북예멘 관계는 냉각되었다. 1978년 6월 24일 가쉬미는 루바이 알리가 보낸 특사의 가방에 든 폭탄이 폭발하여 사망하고, 이틀후 남예멘에서는 이스마일을 중심으로한 親蘇 強硬派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루바이 알리를 처형하였다. 이처럼 남북예멘이 정치적 혼란을 겪는 가운데 통일논의는 중단되고 전쟁이 재발하였다.

---

13) 트리폴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의 特徵은 남예멘이 이슬람교를 통일국가의 國教가 되는 조항을 받아 들이고, 대신 북예멘은 社會主義와 民主主義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할 것에 동의한 것이다. 國土統一院, 「예멘 統一關係 資料集」(서울: 國土統一院, 1990), pp. 21~31 참조.

## 2. 第2期 協商過程 (1979~1985)

1979년 2월 24일 남예멘 군대는 민족민주전선의 게릴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북예멘 남부지역을 침공하였다. 남북예멘간에 國境紛爭이 재발되자 시리아와 이라크 등은 양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종용하였다. 아랍연맹의 주선으로 북예멘의 살레와 남예멘의 이스마일은 1979년 3월 28~30일 쿠웨이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1972년에 체결한 통일원칙을 재확인하였다.<sup>14)</sup>

1980년 남예멘에서 알리 나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북예멘 정부는 평화공존을 統一政策의 基調로 채택하였다. 1981년 12월 2일 아덴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남북예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양국 정부 모두 사회·경제분야의 實質的 協力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였고, 정치적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양국 정권 담당자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하였다. 살레 정권은 남예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부족세력의 견제를 받고 있었고, 알리 나셀 정권은 북예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친소 강경파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5년간의 평화공존 기간동안 살레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 성장을 추구한 반면, 알리 나셀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1986년 1월 내전에 패배하여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북예멘으로 망명하였다. 남예멘에서 黨과 군부내의 강경파가 새로운 지도층을 형성함으로써 남북예멘 관계는 냉각되었다. 그러나 1986년 7월 북

14) 쿠웨이트에서 발표된 共同聲明의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pp. 52~55 참조.

예멘 살레 대통령과 남예멘 알아타스 대통령은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통일논의를 계속할 것을 합의하였다.

### 3. 第3期 協商過程 (1986~1990)

1988년 초까지 남북예멘간의 대화는 사실상 북예멘 정부, 남예멘 정부, 북예멘에 망명한 알리 나셀 추종자들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화의 초점은 통일이 아니라 망명자들의 귀환과 권리보장에 관한 것이었다. 망명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남북예멘간 대화는 표류하는 가운데 石油가 발견되었다. 예멘의 석유매장량은 북예멘 지역에 10억 배럴, 남예멘 지역에 35억 배럴, 남북예멘의 국경지대에 50억 배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남북예멘은 상호 협력해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남북예멘 국경지역에서의 석유의 발견은 예멘인들의 통일에 대한 認識을 변화시켰다. 1988년 5월 3~4일 살레 대통령과 예멘사회당 서기장 알비드는 사나에서 頂上會談을 개최하여 예멘최고평의회와 공동각료위원회의 업무를 재개하고 국경지대의 석유를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두 달내에 두 지역간 주민들이 신분증 제시만으로 자유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채택하였다. 당시 예멘인들은 아직 실질적인 통일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사나 정상회담은 그때까지 반복되어 온 통일합의와는 달리 2년후 실질적인 통일로 이어지는 이정표가 되었다.<sup>15)</sup>

15) Dunbar, "The Unification of Yemen," p. 457 참조.



1989년 초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정책에 따라 남예멘 정부에 개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경제 및 군사원조를 감축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소련이 군사·경제 원조를 줄이자 남예멘으로서 서방진영 및 북예멘과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정책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東西 冷戰構造가 와해되고 남예멘이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게 되자 사우디 아라비아도 남북예멘의 통일협상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게 되었다.

국내외 환경이 통일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변해가자 북예멘 살레 대통령은 아덴을 방문하여 1989년 11월 29~30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아덴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에 따라 남북예멘은 1990년 1월과 3월 두 차례의 공동각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일련의 협상과정에서 남북예멘 지도층은 통일정부 구성에 관한 이견이 없지 않았으나 살레 대통령이 민족통일 과업을 완수한 역사적 인물로 남겠다는 개인적 야심에서 통일을 서두르게 되자 협상은 급진전되었다. 즉 살레 대통령이 권력배분 문제에 관해 남예멘측에 과감하게 양보하여 통일정부 권한을 남북예멘이 동등하게 행사하기로 합의하자 통일논의는 급진전되고 이에 따라 남북예멘의 국경은 완전히 개방되었다.

1990년 4월 19~22일 남북예멘 지도층은 사나에서 회동하여 예멘공화국 선포 및 과도기 조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 합의서에서 남북예멘은 1990년 5월 26일자로 양국을 완전히 통일하고, 통일선포 후 30개월간의 과도기를 거쳐 總選舉를 실시하여 單一國家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남북예멘 지도자들이 상호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합의하자 북예멘의 部族勢力과 남예멘의

스탈린주의자들이 통일반대운동을 준비하였다. 일부 정치집단이 통일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남북예멘 지도층은 원래 예정일보다 빠른 1990년 5월 22일 남예멘 수도 아덴에서 통일을 선포하였다.

#### 4. 統一過程에 대한 評價

남북예멘은 20여년간 전쟁과 타협을 반복해 왔다. 남북예멘 관계가 空轉을 거듭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統一 沮害要因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첫째, 예멘의 분단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소련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統一論議가 진행되면 남북예멘 정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거나 집권자에 대한 반대세력을 지원함으로써 이를 무산시키려고 하였다.

둘째, 남북예멘 정치인들은 통일정책을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양측의 집권자들은 장래가 불확실한 통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政權 安定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결여되어 있던 남북예멘 정부는 통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세력을 동원할 능력이 없었다. 특히 북예멘의 경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部族勢力이 민주공화국 이념에 입각한 통일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할 수 없었다.

남북예멘간의 협상이 통일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게 된 것

은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붕괴와 석유발굴로 인한 예멘인들의 心理的 變化 때문이었다.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외교정책에 따라 소련이 남예멘에 대한 원조를 축소하자 사우디 아라비아도 남북예멘에 대한 간섭을 자제하게 되었다. 한편 석유개발은 남북예멘간 利害得失構造를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즉 남북예멘은 석유개발로 인하여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양측 모두 경제적 번영을 누릴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이같이 국제환경의 변화와 석유개발은 남북예멘의 통일 협상구도를 多者的 關係에서 雙務的 關係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통일정책에 대한 남북예멘 정부의 자율성을 증대시켰다.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남북예멘 지도자의 결단은 통일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협상에서 남북예멘의 기득권층 이익을 상호 보장하는 형식으로 서둘러 타결된 통일합의는 구체적인 실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되었다.

## V. 예멘統一 以後 問題點

### 1. 政治的 問題點

예멘의 정치통합 방식은 남북예멘 정부를 1:1의 동등한 비중을 주고 통합한 것으로 對等統合이라고 말할 수 있다. 對等統合 方式을 택함에 따라 남예멘측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예멘의 政府組織을 기계적으로 합병함으로써 통일정부의 조직은 비대

화되는 한편 일관성을 결여하게 되었다. 특히 남북예멘의 군대는 현지에 계속 주둔하며 기존의 명령계통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군의 명령체계가 실질적으로 단일화되지 못하였다. 軍事的 統合은 완결되지 못한 반면 部族勢力은 독자적으로 무장집단을 거느리고 있어 통일정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치적 폭력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었다.<sup>16)</sup>

통일정부는 30개월의 과도기간이 종료되는 1992년 11월 22일 이전에 선거를 치르고 新政府를 출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총선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1993년 4월 27일에야 실시되었다. 신정부는 閣僚職을 정당별로 안배하고, 행정개혁과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공약하였다. 그러나 총선 후 정부의 權力構造와 정책방향에 대해 남북예멘 출신 정치인들간에 견해차이가 커지면서 예멘 정국은 더욱 혼란해졌다.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평의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예멘사회당은 改憲보다는 지도층 내부 개혁을 강조하였다. 국민회의와 예멘사회당간의 대립이 심화되자 예멘사회당 당수 알비드는 신정부의 부통령직 수행을 거부하고 1993년 7월 아덴으로 귀향하였다.

남북예멘 지도자간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재분단의 위기가 고조되자 요르단의 국왕 후세인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 아라파트 등이 화해를 중재하였다. 이에 살레 대통령과 알비드 부통령을 비롯한 남북예멘 지도자들은 1994년 2월 20일 요르단의 수도

---

16) 柳志鎬 「예멘 統一이 韓國에 주는 敎訓」, 公館長 歸國 報告 시리즈 93-8(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3), pp. 27~28 참조.

암만에서 회동하여 위기종식을 위한 和解協定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남북예멘 군대는 곧이어 탱크까지 동원한 대규모 무력충돌을 벌이게 되었다. 그후 오만과 요르단 관리들과 미국, 프랑스 외교관들이 남북예멘 군대의 화해를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말부터 남북예멘 군대사이에 전투가 격화되어 예멘은 현재 전면적인 內戰을 겪게 되었다.

## 2. 經濟的 問題點

통일정부는 과도기간중 남예멘 디나르貨와 북예멘 리알貨를 함께 사용하도록 결정하고 남예멘 지역의 사유화 정책은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실시하였다. 즉 소규모 공장과 토지는 私有化시키지만 외국인 소유 토지나 대지주 토지에 대해서는 國有化를 계속 견지하였다. 통일정부는 남예멘 지역의 경제를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국유화되었던 기업과 토지를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술탄과 부족장 등 前所有者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재정 형편상 보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통일 직후 예멘경제는 많은 부작용을 겪게 되었지만 예멘인들은 석유수입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분위기는 1990년 8월 2일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걸프戰이 돌발함으로써 무산되었다. 전쟁에 패배한 이라크는 경제난으로 예멘에 대한 경제원조를 중단하게 되고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미국 등은 예멘 정부가 연합군을 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적 지원을 철회하였

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예멘에 대해 경제원조와 借款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멘 근로자 약 100만명을 강제귀환시켰다. 해외 근로자들이 귀환함에 따라 약 4억달러에 달하는 外貨 획득원이 없어지는 반면 失業率이 급증하였다.<sup>17)</sup> 현재 예멘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걸프전쟁의 여파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고 있다.

### 3. 社會的 問題點

이슬람 精神이 사회·문화 통합의 기초가 됨에 따라 家父長的 部族社會의 전통적 가치관에 익숙한 북예멘 주민들은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반하여, 남예멘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다. 이에 남예멘 여성들은 前과 같은 신분보장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고, 북예멘 여성들은 지위향상을 요구하고 있어 女權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북예멘 지역에서 保守主義者들이 이슬람 율법을 모든 法의 유일한 근원으로 만들자고 주장하며 소요를 일으키자 남예멘 지역에서도 사회집단의 시위가 빈발하게 되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아덴 주민들은 북부 보수주의자들의 불합리한 태도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남예멘인들의 반정부 시위는 걸프전쟁의 여파로 경제난이 심해지고 보수주의자들의 정치적 폭력이 빈번해 지면서 과격해지기 시작하였다. 통일예멘에서 반정부 시위, 노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주민들의 폭동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경제사정의 악화에 있지

---

17) Hall, *Yemen: The Politics of Unity*, p. 16 참조.

만, 남북예멘 출신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사회집단들의 시위를 선동함으로써 소요사태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sup>18)</sup>

## VI. 南北韓 統一에 대한 示唆點

### 1. 南北예멘과 南北韓의 類似點과 相異點

예멘과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잦은 外侵을 받았지만 강한 민족의식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理念對立이 발생하여 단일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군사적 대치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예멘과 한국간의 유사점만을 강조하다 보면 예멘의 경험이 기계적으로 남북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예멘과 남북한간의 상이점을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예멘은 군사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세력균형을 이루어 전쟁이 발발한 경우 단기간에 끝났고 주변 아랍국가들의 중재로 쉽게 休戰에 임하였다. 한편 남북한은 남북예멘의 약 10배에 달하는 정규군을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한 사이에 화해를 중재할 만한 국제적 환경을 갖고 있지 않다.

---

18) Eric Watkins, "Yemen perseveres with democracy," *The Middle East*, May, 1992, pp. 20~21; "Yemen's riots prompt talk of reform," *Middle East International*, February 19, 1993, p. 18 참조.

둘째, 남북한 정부는 남북예멘 정부 보다 사회통제력이 강하며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간의 經濟力 差異는 남북예멘간의 경제격차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져 있다.

셋째, 남북한은 韓國戰 이후 주민들의 왕래를 완전히 단절한 채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시켜 온 결과 사회·문화적으로도 남북예멘보다 훨씬 더 異質的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2. 統一 協商過程에 대한 示唆點

남북예멘과 남북한간의 차이점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은 남북예멘 보다 통일문제에 관한 합의점을 찾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측과 지속적인 대화가 불가피한 바, 통일 협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예멘의 장기간의 협상과정은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實體를 인정하고 상대방 체제에 대한 분열전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남북예멘간 무수히 반복되어 온 합의과정은 상호 불신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합의서는 이해대립이 재발될 경우 쉽게 白紙化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합의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인권문제 등 통일원칙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예멘간 통일에 대한 합의사항은 남예멘이 開放·改革을 실시하여 체제간 이질성이 해소됨으로써 실질적인 결실을 맺게 되



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개방·개혁을 촉구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예멘 통일사례는 남북한이 統一過程을 원만하게 진행시키고 통일 이후 정치·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 협상과정을 공개하고 國民的 合意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통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 3. 統一 合意案件에 관한 示唆點

예멘식 통일은 통일에 대한 합의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통일정부의 非效率性和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합의통일을 추구할 경우 통일에 따른 비용과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첫째, 예멘통일은 남북한이 통일정부의 權力配分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남북한도 통일정부를 구성할 경우 어느 한 쪽이 패배감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지만, 형식적인 평등원칙에 입각한 권력배분은 지양해야 한다. 통일정부는 반드시 대다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은 통일 이후 정치적 폭력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 경찰 등 物理的 強制力을 행사하는 기구에 대한 統一政府의 통제권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예멘의 경험은 정치통합의 최우선 순위를 軍統合에 두고 이를 단기간에 완결지어야 한다는 교훈

을 준다.

마지막으로, 통일국가의 경제적 문제점이 단순히 異質經濟體制 통합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발전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은 형식적인 平等原則만을 고집하지 말고 남북한의 기술발달 수준과 실질적 경제력을 고려한 經濟·社會統合 政策을 수립해야 한다.

## VII. 結 論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양측의 기득권층이 서둘러 선포한 예멘의 통일은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南北이 각기 군대를 유지하면서 形式的 平等論理에 입각하여 정치권력을 안배한 예멘의 통일방식은 통일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빈번히 발생한 정치적 폭력을 규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총선 이후 정부조직을 재조정할 때 예멘의 통일방식은 民主的 原則에도 위배되어 있었음이 노정되었다. 신정부가 내각의 각료직을 선거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안배하자, 議會 총의석의 1/5 밖에 차지하지 못한 남예멘 출신 정치인들은 심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권력구도 개편을 둘러싸고 남북예멘 출신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실질적 통일은 결국 힘의 대결로 완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예멘의 合意統一은 武力對決로 귀착하게 되었으며 통일을 선포할 당시 낙관적 기대에 부풀어 있던 예멘인들은 현재 통일에 대해 심한 환멸감을 느끼고 있다. 예멘의 현사태는 상호 불신을 해소하

지 못하고 內戰의 불씨를 묻어둔 채 합의서만을 통해 서둘러 이룩한 통일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예멘의 불행한 경험은 남북한이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통일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결코 통일을 감정적으로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준다.

# 예멘統一 以後 問題點

— 政治·軍事 問題點을 中心으로 —

柳 志 鎬

(前 예멘駐在大使)

## 〈 목 차 〉

- I. 複數政黨 政治의 陣痛
- II. 南北 野戰軍 統合의 遲延
- III. 結 語

南北예멘의 역사적인 통일선포 이후 부터 過渡期의 상반기까지 여러 복합적인 국내외적 요인으로 심각한 경제난과 정치질서의 문란, 행정의 준마비상태가 계속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경황속에서도 聯邦의 두 집권정당간의 협력관계는 비교적 원만한 수준을 유지해 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과도기 후반에 들어 총선의 법정시한이 다가오면서 國民會議黨과 예멘社會黨간의 연정체제에도 균열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고 총선후에는 재야정치세력이 제2당으로 부상, 기존의 2당 연정질서를 社會黨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3黨體制로 확대함으로써 國民회의당—사회당간의 龜裂을 가속화시켰다.

본고에서는 총선후의 힘겨웠던 3당연정체제의 출범과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 통일예멘의 再分斷 危機를 몰고 온 군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I. 複數政黨 政治의 陣痛

남북예멘 정상간에 당초 합의한 통일의 과도기는 30개월간(1990.5.22~1992.11.22)이었으나 양측간의 總選에 관한 절충이 늦어지는 바람에 36개월간으로 6개월이 연장된 것이다. 過渡期를 마감하게 될 총선은 그 성격이 복수정당의 자유선거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만한 것이었지만 긴박한 걸프사태에 가려져서 뒤늦게 1992년에 접어들면서 정당간의 진지한 論議의 대상으로 부각된 감이 있다.

1992년 11월 22일 이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총선은 특히 社會黨에게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사활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統一 協商 당시 부터 선거기반을 인구가 희소한 남예멘에 의존해야 할 처지에 놓인 社會黨側이 과도기의 최대한 연장을 주장했었던 것도 총선의 승산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남예멘수뇌의 판단에는 통일의 過渡期를 이용하여 서방외자와 기술도입으로 석유자원 개발과 아덴 자유항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면 북부예멘의 支持基盤을 확대, 핸디캡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 같다. 이들에게 통일은 소련의 경제원조 중단에 따른 경제적 질식으로 부터 숨통을 돌릴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남부의 조직력과 행정력을 잘만 구사한다면 중앙정부와 부족사회간

의 전통적 갈등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북부예멘에서 社會黨의 지지 세력을 부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과도기 각료구성에 있어서 남측이 경제각료출신의 알마따 스총리는 고사하더라도 경제기획개발, 석유광물자원, 수산자원, 교통, 주택, 도시계획 등의 핵심경제 각료직을 차지하였던 사실에서 그러한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남예멘수뇌의 이러한 상황 예측은 통일후의 치안부재와 통일정부의 무기력 때문에 크게 빗나갔다. 통일직후의 걸프사태가 사우디를 비롯한 인접산유국으로 부터의 經濟援助의 중단과 80만에 달하는 예멘인 해외노동자의 강제귀환으로 통일기반을 다져야 할 과도기에 3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물가와 실업률의 앙등을 초래, 사회질서를 문란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주요 외교공관 폭파사건, 빈번한 외국기술자 납치 및 차량도난사건, 정계인사 특히 남예멘계에 대한 테러사건 등은 남예멘수뇌가 석유개발과 아덴자유항건설을 위해 갈망했던 서방의 투자가들과 그들의 개발투자유치를 위축시켜 이대로 가면 남부예멘의 경제개발은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는 위기의식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런데 일견 불가항력적으로 보이는 걸프사태의 부정적 영향을 좀 더 분석하면 그 대부분이 사우디가 예멘의 걸프사태 발발시 취한 입장에 대한 報復措置(예멘인 근로자들의 추방, 예멘에 대한 경제원조 중단 등)와 통일협상 및 통일과도기 연정에서 배제되었던 회교부족세력의 국민투표 반대시위 그리고 일부 부족장들에 의한 외국인 신변 및 차량 납치사건 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정부의 무기력 현상은 權力按配原則에 따른 정부통합으로 인

한 정책적 결단부족, 과도기간중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의 二元化, 이에 따른 위계질서의 이완과 생활고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 저하에 기인하였다. 더욱이 정부기관의 통합이 중앙정부에 한정되어 있어서,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영향권 밖에 있어 온 部族社會에 대해서는 물론, 남예멘의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남북예멘의 화폐를 비롯, 차량등록번호, 국영 항공사, 통관절차, 여권, 야전군, 군복도 통합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선이 치루어질 경우, 남부예멘에서 압승을 거둔다 손치더라도 과반수 확보를 기대할 수 없는 집권社會黨은 동남부지역 석유개발과 아덴 자유항계획을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연정에서 물러나야 할 사태를 92년 초부터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社會黨이 이러한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선거결과에 구애 받지 않고 연정에 계속 남을 수 있다는 사전보장을 國民會議黨으로부터 받아 내는 일이 시급한 과제였다. 社會黨의 암중모색 단계에서 國民會議黨은 예멘개혁당을 비롯한 재야세력으로 부터의 압력으로 모든 정당이 선거결과에 승복한다는 원칙의 관철을 주장하였다. 이 시점으로 부터 國民會議黨-社會黨간의 연정체제에는 균열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이다.

알아따스총리(社會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서 각의의 명의로 경제안정과 부족사회의 사병철폐 등 치안질서를 위한 개혁조치를 대통령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社會黨 수뇌는 남예멘계 야전군의 대북예멘계 야전군과의 統合計劃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남부 석유개발정책에 있어서 남예멘계 석유광물자원 장관과 북예멘계 차

관 사이에 견해대립이 표출되었다. 동시에 社會黨人士에 대한 연속적인 테러사건이 일반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알비드부통령은 급기야 92년 6월 조용히 수도사나를 떠나 거처를 구남예멘의 수도 아덴으로 옮김으로써 國民會議黨의 살레대통령에 대한 협력거부를 간접적으로 시위하였다.

### 〈改革黨과 社會黨의 葛藤〉

한편, 북부의 회교 부족연합세력과 社會黨間의 갈등은 구조적인 면이 있다. 이 세력에는 북예멘 내전(1962~1970) 당시 제정일치의 왕정과측에 가담하여 군사정권의 공화파와 4만 이집트 지원군을 상대로 8년간 싸운 끝에 휴전을 맞아, 共和一王政 聯立政府에 참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들은 통일이전에는 사우디와 함께 북예멘의 남예멘사회주의 정권과의 통일에 반대했고 통일과도기에는 예멘개혁당으로서 부족사회의 사병철폐와 불법무기단속을 요구하는 社會黨과 침례하게 대립하였다. 과도기 社會黨과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國民會議黨은 재야의 개혁당에 제재를 가하라는 社會黨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응하지 않음으로써 社會黨과의 사이가 더욱 소원하게 되었다. 國民會議黨은 무기등록의 법제화에만 합의하고 부족사회의 사병제에 대해서는 묵인한다는 선에서 타결하였다.

살레대통령과 알비드부통령은 92년 12월 지방행사관계로 제3의 도시에서 우연히 만나는 모양새를 갖추어 회동하고 이 자리에서 살레가 선거후 거국내각 구상을 피력하여 알비드의 연정 참여 사전보장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로써 양집권당간의 불편한 관계는 일단



해소되고 총선준비에 관한 여야간의 협의가 본격화되었다. 예멘 選舉委員會는 선거일을 당초 1993년 2월 17일로 정하였다가 준비부족의 이유로 4월 27일로 재연기하여 준비부족 뿐만 아니라 선거이후의 정치일정에 대한 심각한 의견대립을 노정하였다.

國民會議黨은 4월 27일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46%를 얻어 제1당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으나 社會黨은 개혁당에 눌러 제3당으로 전락하였다. 이 선거의 결과로, 國民會議黨, 예멘개혁당 그리고 社會黨에 의한 복수정당 정치가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중동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된 셈이었다. 어느 당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거국내각의 구성과 대통령위원의 선출을 3대당간의 원만한 합의없이 당장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재야세력으로서 연정에서 배제되었던 개혁당이 제2당으로 부상함에 따라 그 위상에 걸맞는 각료배당과 大統領委員會 참여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에 그동안 연정에 참여해 온 社會黨은 새 舉國內閣에서도 계속 전과 같은 비중의 발언권을 요구하였다. 각정당의 이러한 상충된 이해관계에 대해, 國民會議黨이 제1당으로서 슬기롭게 지도역량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원만한 정부운영은 고사하고 신정부출범마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환경이 변하였던 것이다.

國民會議黨과 社會黨은 개혁당에 6명의 각료를 배당함으로써 선거후 1개월 이상 지연된 조각을 완결하지만 5명의 대통령위원 선출문제는 헌법개정문제와 얽혀 1993년 10월 14일 대통령위원 임기 만료일 직전까지 타협을 보지 못하였다. 國民會議黨과 社會黨간에 선거전에 합의한 바 있는 兩黨協力協定에 의하면, 두 당은 선거후

에 헌법을 현행 대통령위원회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대통령자문회의에서 상원(兩院)으로 각각 개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社會黨은 이러한 헌법개정에 대하여 독재화 가능성과 장기집권의 폐단을 이유로 반대하는 재야측의 움직임에 편승하여 大統領中心制 개헌에 반대하고 나서는가 하면 개혁당은 이에 찬성하나 회교성전을 법의 주원천에서 유일원천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을 추가로 제의함으로써 헌법개정협상을 교착상태로 빠지게 하였다.

4월 27일 선거의 최종집계는 선거무효 소송 대상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개표지연으로 5월 중순에 발표되었고 새의회의 개막을 보게 되었다. 행정부의 각료진 구성도 6월 중순에나 결정되고 현대통령위원회의 임기가 국회의 양해 아래 새대통령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장되었다.

#### 4. 27 선거 정당별 의석

國民會議黨	GPC	121
예멘改革黨	YRC	62
예멘社會黨	YSP	56
無所屬		47
社會아랍바스당	SABP	7
알하크당	AHP	2
統一나세르당	NU	1
民主나세르당	ND	1
矯正나세르당	NC	1
其他(1993.5.1 현재 사망, 소송, 무효 3區)		3
의석정원		301

신거국내각의 구성을 정당별로 보면, 1993년 6월 14일 현재 國民會議黨 11, 예멘社會黨 9, 예멘개혁당 6, 사회아랍바스당 2, 통일나세르당 1인으로서 제3당인 예멘社會黨이 제2당 예멘개혁당 보다 많은 각료배당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현행 헌법하에서의 최고결정기관인 대통령위원회의 선출이 근 6개월간 지연된 배경에는 5명의 대통령위원중 몇 명을 제2당과 제3당에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개혁당 공동대표인 국회의장 아흐마르의 大統領署理 自動承繼問題가 있다. 과도기에서는 國民會議黨이 3위원(위원장 즉 대통령 포함), 社會黨이 2위원(부위원장, 즉 부통령 포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제2당인 개혁당에 1위원을 배당하자는 것이 국민회의장 입장인데 반해 社會黨은 총선직후 상당기간 개혁당의 대통령위원회의 참여를 완강히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서 개혁당측은 제2당으로서 당초 2위원을 희망하다가 막판에 1위원으로 후퇴하였다.

한편, 현대통령위원회의 선출 법정시한인 1993년 10월 14일이 다가오면서 그 때까지 대통령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아흐마르 국회의장의 대통령서리직 자동승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동시에 사우디에 가까운 그가 사우디와의 國境紛爭을 종결할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문이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문에 자극을 받은 社會黨과 國民會議黨측 수뇌가 國民會議黨의 3몫중 1몫을 개혁당에 양보하여 1993년 10월 11일 대통령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함으로써 자동승계사태를 모면하게 되었다.

### 새 大統領委員의 得票數

Ali Abdulla Saleh	國民會議黨	263	위원장	임기: 93.10.13~98.10.12
Ali Salem Al-Beidh	예멘社會黨	207	부위원장	
Shaikh Al-Zindani	예멘改革黨(신임)	201	사무총장	
Aziz Abdul Ghani	國民會議黨	244	위원	
Salem Saleh Muhammed	예멘社會黨	172	위원	

대통령위원회에 입후보한 8명중 부총리 무자히드 아브 와리브(바스당)와 압둘 말리크 알말립대사(개혁당)는 출마를 철회, 6명의 후보에서 5명이 선출되었다. 개혁당 공동대표 진다니 대통령위원회에는 서열 3위와 신설 보직 대통령위원회 사무총장을 부여하여 각 별히 예우한 흔적을 보였다. 그리고 알비드부통령은 不出馬宣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위원 겸 부통령으로 재선되었지만 사나로 상경하지 않고 아덴에 계속 남아 있었다.

## II. 南北 野戰軍 統合의 遲延

남북양측의 군부는 통일협상과정과 통일과도기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것은 남북예멘이 현세기에 각각 독립한 이래 軍事力을 필요로 하는 국내의 정세에 직면해 왔기 때문이다. 북예멘의 경우, 사우디아와의 國境衝突(1933~1934), 8년간의 내전, 두 차례에 걸친 남예멘과의 전쟁 그리고 부단한 북예멘의 부족사병과 남측 게릴라와의 衝突을 통해 동서 양진영으로부터의 군사원조로 군부를 나름대로 훈련, 강화해 왔다. 남예멘의 경우도, 남예멘이 냉

전시대 구소련의 阿中東地域의 전략적 기지로 되면서 남예멘군부도 10여년간의 소련의 군사원조와 直接指導에 힘입어 자체의 방위 필요성을 능가하는 규모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특히 군부가 당시 포병사령관(통일정권의 타헤르국방장관)의 지도아래 1986년 당시 모하메드 나세르대통령이 社會黨 과격파 지도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를 진압한 것을 계기로 군부의 영향력과 위상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그후 공산권의 대남예멘 원조중단은 이에 의존해 왔던 군부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북예멘의 관점에서, 고도로 훈련되고 소련제 현대무기로 무장한 남예멘군이 통일후의 평화 뿐만 아니라 통일예멘의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보강시켜준 것으로 보았다. 前駐예멘 미국대사 Charles Dunbar는 그렇게 보강된 병력으로 부족세력을 통제해보겠다는 것이 북예멘 대통령의 통일을 추구했던 3대동기의 하나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남예멘은 북예멘과의 國力比較에서 군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남예멘군의 통일예멘군에로의 편입은 통일협상과정은 물론이거니와 통일이후에도 북부정치세력과의 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를 상실하게 된다고 보았다. 북예멘과의 대등한 위치에서의 예멘社會黨의 연정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통일전 남예멘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 통일과도기 후반이래 社會黨 수뇌의 발언과 반응에 비추어 알비드 부통령과 살렘 살레대통령위원의 일관된 집념이었다.

남북예멘의 야전군 통합지연이 전적으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통일후 수도 사나의 주택난과 남예멘 관리의 자

너교육, 급여수준 평준화에 따른 재원문제 등이 軍統合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사정은 국방부산하 뿐만 아니라 다른 政府機關의 統合에도 지장을 주었다. 걸프사태가 한창이던 과도기의 전반에서는 국민적인 단합분위기가 주효하여 외국공관의 경비업무에 군복이 다른 남북예멘군이 합동근무하는 모습 마저 종종 눈에 띄었었다. 이러한 모습은 그후 國民會議黨과 社會黨간의 협력관계가 원만치 않게 되자 사라지고 군통합 과정은 중단되며 남예멘 야전군에 대한 社會黨의 통제체제도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총선거 후 社會黨은 國民會議黨과 개혁당으로 부터 군사통합에 대한 압력을 더 강하게 받았다. 이러한 압력을 받을 때 마다 社會黨은 군의 개혁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중앙정부 영향권 밖에 있는 부족사회의 私兵制 철폐, 군인사의 공평성 확보, 군 대우개선으로 응수하였다.

과도기중 社會黨의 집요한 부족사회의 사병문제 제기는 國民會議黨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다 주었다. 2대 부족회교-연합세력중(국회의장 아흐마르가 공동대표로 있는 하시드연맹과 남부에 집중분포되어 있는 바켈연맹) 國民會議黨의 살레대통령이 하시드부족사회에 소속되어 하시드연맹과 개인적인 연대를 맺고 있었다. 살레대통령이 1978년 약년에 북예멘의 대통령으로 추대된 이래, 16년간 계속 집권을 할 수 있었던 요소중 하나는 군부와 부족세력에 대한 그의 탁월한 관리능력에 있었다. 따라서 “治外法權的”인 부족사회의 존재 특히 사병제에 대해서, 이러한 부족사회와 더불어 정치지도자로 대성한 살레대통령과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남예멘

의 지도자로 성장한 알비드부통령의 시각간에는 격차가 있게 마련이었다.

또한 國民會議黨이 부족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회교율법에 준한 독자적인 사법제도와 사병제를 개혁 내지 철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수년간의 남북예멘간의 정치적 갈등은 기본적으로는 남예멘의 社會黨과 북예멘의 회교부족세력을 대표하는 예멘 社會黨간의 대립관계를 북측 國民會議黨이 중간 위치에서 조정하는 양상을 띠어왔다. 오랫동안 존속되어 온 갈등구조속에서 그리고 3대정치세력이 사실상 제각기 병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 남북예멘간에 진지한 統一協商이 시작되었던 1988년 부터 금년 초까지 도합 7년간 대규모 무력충돌이 없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 國民會議黨은 3당 관계에 있어서 개혁당과 社會黨 양쪽으로 부터 번갈아 상대당과 야합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國民會議黨이 社會黨의 부족사회 사병제의 철폐와 불법무기단속의 제도화 요구에 대해서 무기단속의 법제화만을 부분수용한 것은 國民會議黨의 조정노력의 단면을 보여 주는 선례이다. 이 부분적인 수용은 사병제를 당분간 묵인하는 선에서의 타협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일예멘군부의 3분화의 길을 사실상 터 놓은 셈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회의당은 사전보장을 완강히 반대하는 개혁당으로 부터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회당의 선거전 연정참여 보장요구를 수용하였다.

알비드副統領의 사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1993년 10월 21일자 公言은 그동안 사나와의 協力拒否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社會黨 차원으로 한단계 올린다는 警告性 발언이었다. 이는 社會黨의 반대에

도 불구하고 國民會議黨이 개혁당의 대통령위원회 참여를 허용하고 개혁당과의 공동명의로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격렬한 반발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警告에 이어 사나에 남아 있었던 남 예멘계 각료를 비롯한 고위관리 및 社會黨간부들의 귀환으로 연말에는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정부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타헤르 국방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제2의 군사령부가 아덴에 설치되었다.

이렇게 분단화의 움직임이 표면화되면서 아덴의 인접 아비안주 知事의 인사조치를 둘러싼 사나와 아덴간의 행정적인 충돌이 발생하였다.. 알아따스총리가 북예멘계의 아비안주 知事를 교체하자 사나정부는 살레대통령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동 조치를 무효화하였다. 이런 와중에 주지사공관에서 수명의 사상자를 내는 총격전이 일어났다. PLO의 아라파트의장과 오만왕이 중재에 나서고 국내적으로는 각정당대표들로 구성된 범정당 政治圈對話委員會가 94년 1월 18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채택, 살레대통령과 알비드부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1. 모든 암살범, 강도범을 3개월 내에 체포, 공개처벌할 것.
2. 현안의 헌법개정안을 3 내지 5개월 내에 확정할 것.
3. 시내 소재 군사시설, 검문소를 즉시 철수하고 군의 시내순찰을 중지할 것.
4. 부족간의 불법적인 적대행위를 금지할 것.
5. 정보기관은 신법에 의거 설치할 것.
6. 대통령위원과 정부간의 권한을 확정할 것.
7. 의회주의를 신봉할 것.



8. 세수입, 석유가스 및 수산광물자원은 국유로 관리할 것.
9. 지방의 자치단체의 치안은 내무부에서 담당할 것.
10. 정부는 일정표에 따라 정치개혁안을 철저히 이행할 것.
11. 정치개혁안 6인 分科委員會를 구성, 운영할 것.

한편 오만과 요르단왕의 중재로 암만에서 살레와 알비드가 1994년 2월 20일에 회동, 상기 정치개혁안에 기초한 和解 및 改革協定에 서명하여 일단 정치적 분열 위기는 모면하였다. 이 새로운 개혁협정에는 대통령의 안보와 재정분야에서의 권한 축소, 부통령의 남예멘 유전지역에 대한 統制權 縮小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알비드는 귀로(歸路)에 사우디를 방문하였는 바, 이는 사우디와 남부예멘간의 관계발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 〈남북 兩側 군부의 武力衝突〉

예멘의 정국이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은 1994년 4월 27일 사나 서북방 60km 암란시 근교 합동군사기지에서 남북군간의 무력충돌이 발발, 최소 800명의 사망자를 내고 85대의 탱크가 파괴됨으로써 빚나갔다. 이곳에 설치된 합동군사기지는 상기 정치개혁안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한 예방 조치의 일환이었다. 사나에서는 총리대행을 맡고 있는 마끼부총리가 저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이튿날 전투는 일단 진정되었지만, 1주일 후인 5월 4일 남북예멘의 국경지대에서 전투가 재연되어 북부군이 남진을 계속하다가 아덴 근방에서 전황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사나와 아덴간의 거리가 약 400km에 달해 북부군으로서는 1주일이상 전투가 계속될 경우 군수물자 및 식량 보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의 예상대로 아덴의 몰락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남부군은 공군과 해군이 북부군에 비해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북부에 대한 미사일공격과 공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膠着狀態가 지속되면 아랍연맹의 중재로 휴전성립의 가능성이 예견되나, 북부가 5월 12일 제의한 統一憲法遵守의 前提條件을 남부가 어떤 형태로 수용할지 주목된다. 남부는 휴전이 성립될 경우 알비드부통령과 사렘 살레대통령위원이 몇 차례 제의한 연방제를 전제조건으로 정치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 III. 結 語

예멘의 정국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는 1994년 4월 27일 사나 서북방 60km 암만시 근교 합동군사기지에서 남북군간의 무력충돌이 발발, 최소 800명의 사망자를 내고 85대의 탱크를 파괴하는 사태로 발전함으로써 무산됐다. 이곳에 설치된 합동군사기지는 상기 정치개혁안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한 예방 조치의 일환인 것이다. 사나에서도 총리대행을 맡고 있는 마끼부총리가 저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이튿날 전투는 일단 진정되지만, 1주일 후인 5월 4일 남북예멘의 국경지대에서 전투가 재연, 북부군이 남진을 강행하다가 아덴 근방에서 전황은 교착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듯 하다. 사나와 아덴간의 거리가 약

400km에 달해 북부군이 상당기간 전투를 계속할 경우 군수물자 및 식량보급의 애로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대로 아덴의 몰락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군과 해군이 비교적 우수한 남군은 마지막 보루인 아덴의 방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착상태가 지속되면 아랍연맹의 중재로 휴전 가능성이 예견되나, 북부가 5월 12일 제의한 통일헌법준수의 전제조건을 남부가 어떤 형태로 수용할는지 주목된다. 남부는 휴전이 성립될 경우 알비드 부통령과 사렘 살레 대통령위원(社會黨 副書記長)이 몇차례 제의한 연방제를 전제조건으로 정치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는 아덴의 함락으로 인한 남예멘의 완전 항복과 내전의 장기화(소말리아화)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간의 불화가 본격화한 것은 總選에 대한 남예멘측의 불안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면전쟁으로 발전된 이번 사태는 몇몇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남북 양측은 軍事力의 3分化가 과도기를 통해 줄곧 武力衝突의 蓋然性을 높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認知하였을 뿐,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둘째, 統一協商과 과도기 과정을 통해, 남북수뇌는 회교 부족세력과 사우디 아라비아왕국이 방해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들을 경원하여 이들의 誤解와 不信을 조장하였다. 만일 사우디에 대한 설득 노력을 통일협상시부터 시도하였더라면, 예멘에 대한 보복조치는 없었거나 이로부터 받는 피해는 훨씬 적었을는지 모른다. 회교 부족세력의 남예멘 사회당에 대한 반발도 적었을는지 모른다.

셋째, 複數政黨 制度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 제도를 시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3당간의 갈등구조를 심화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복수정당제는 統一예멘의 再分斷의 危機를 오히려 조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남예멘수뇌의 統一을 추구하는 동기와 북예멘의 동기간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통일이 어떻게 두 분단정권에 共通의 利益이 될 수 있을지, 두 정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공통이익을 가져다 줄지를 충분히 검토하거나 협의하지 않았음이 통일후에 밝혀지고 있다. 남북예멘의 統一過程을 회고해 볼 때, 남북예멘간의 실망과 갈등은 총선이후 증폭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경제사정이나 사회적 혼란, 또는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 보다 심각했던 시기는 총선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은 총선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統一協商時, 통일과도기 이후에 대한 視覺(Vision)이 불분명 할 뿐더러 幻想的인 기대만 충족만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섯째, 예멘의 통일직후 북측이 제안하였었고, 이번 무력충돌 직전에는 남측이 再分斷의 危機를 극복하는 대책으로서 제의한 聯邦制 구상은 어느 한쪽이 무조건 항복하지 않고 휴전이 성립될 경우 북측의 국민회의당, 예멘개혁당 그리고 남측의 예멘사회당 등 3대 집권 정당간의 정치협상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여섯째, 예멘의 이번 사태에서의 교훈은 統一過程은 신뢰구축 단계에서 초기통일단계까지 정부주도로 추진함이 바람직하겠으나 그 후부터는 각부문의 통합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민간주도로 신속

히 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남북예멘의 통일사례는 이 점에서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이관단계에서 통일의 방해요소로 간주됐었던 회교 부족사회에 대한 사회, 정치적 통합과정이 여러 복합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지연되었었고, 남북예멘의 수뇌들이 통일협상과 과도기를 통해서 회교 부족 사회의 통합문제를 통일후의 정책과제로 미루려했던 흔적이 많다.

## 예멘 공화국의 군사력

1. 현역병력: 64,500명(약 42,500의 병역 의무자)

2. 예 비 역: 75,000명 추산

3. 육 군

가. 병력: 60,000(이중 42,500 병역 의무자)

여단 10개 장갑여단

23개 보병여단

5개 기갑여단

2개 공수특전단

5개 민방위여단

7개 포병여단

3개 지대지미사일 여단

나. 장 비

- 주력전투탱크 1,275대

· 내 역: 250(T-34)

725(T-54/55)

250(T-62)

50(M-60A1)

- 정찰기: 125(AML-90)

60(AML-245)

150(BRDM-2)

- 장갑전차: 300대(BMP-1/4)

- 장갑자동차: 670대

· 내 역: 70(M-113)

600(BTR-40/60/152)

- 견인포: 477문

· 내 역: 100문, 85mm, D-44; 35문, 105mm,

M-1011A; 30문, 122mm, M-1931/37; 155문  
 D-30; 50문, M-1938; 90문, 130mm,  
 M-46; 10문, 155mm, D-20; 12문, M-114  
 공 격 포 : 20문 85mm, SU-85 30문 100mm, SU-100  
 다발로켓포: 290문 122mm, BM-21  
           15문 132mm, BM-13  
           30문 140mm, BM-14  
           35문 240mm, BM-24  
 박격포: 180문 81mm  
           250문 82mm  
           110문 120mm  
           100문 160mm  
 지대지 미사일: 6 Scud B  
                   10 SS-21  
                   12 FROG-7  
 대전차 유도탄: 200 TOW  
                   500 Dragon  
 무반동포: 20문 82mm, B-10  
           15문 82mm, M-43  
           50문 106mm, M-40A1  
 대전차포: 42문 100mm, M-1944(BS-3)  
           40문 100mm, T-12  
 대공포: 52문, 20mm, M-165  
           20문 20mm, Vulcan SP  
           200문 23mm, ZU-23, ZSU-23-4  
           200문 37mm, M-1939  
           120문 57mm, S-60  
           40문 85mm, KS-12  
           225문 130mm, KS-30

- 지대공미사일: SA-7, SA-9

#### 4. 해 군

가. 병 력: 약 1,500명

나. 주기지: 아덴항, 호테이다항

다. 시 설: 알 무카항, 페림도, 알 무칼라항, 스코트라도

라. 해안경비함: 160척

- 내 역: 코르벳함 2척, Tarantal-1(1x2 SA-N-4, 2x12 ASW RL 대공-대잠수함 로켓발사 장비, 2x2 76mm포); 미사일 정 6척, Soviet Osa-11(4x SSN-2B Styx SSM 지대지 미사일); 연안 경비정 8척(미제 US Broadsword 32-m 연안 쾌속정 PFI 사나호 3척, 소련제 Soviet Zhuk 5척)

마. 소해정: 9척

- 내 역: 소련제 해상소뢰정 Natya MSO 2척; 소련제 연해 소뢰정 Sonya NSC 1척; 소련제 연안 소뢰정 Yevgenya MSI 6척

바. 상륙용 주정 4척

- 내 역: 소련제 중형 상륙용 선박 2척(Polnocny MSO 100명, 5개 탱크 수송능력); 소련제 기계화 상륙용 주정 2척(Ondatra, 인력과 차량수송)

사. 지원 함정 2척: 1,300톤급의 소형 탱커

#### 5. 공 군

가. 병력 3,000명, 109대의 전투용 항공기, 10대의 무장 헬리콥터

나. 지상공격 전투기: 4개 전대 squadron(미제 F-105 전투기 11대로 1개 전대, 소련제 SU-20 전투기 35대로 3개전단 구성)

다. 전투기: 4개 전대 squadron(Mig-21 소련제 전투기 47대)

라. 수송기: 3대(An-12), 1대(An-24), 10대(An-26), 2대(C-130), 4대(C-47), 3대(Twin Otter), 2대(F-27), 2대(Skyvan 3M)



마. 헬리콥터: 10대(공격용 Mi-24), 5대(AB-212), 3대 (AB-214),  
40대(Mi08)

바. 훈련기: 8대(F-5B 전투용가능), 8대(Mig-21U 전투용 가능), 15  
대(Yak-11)

사. 방 공: 30 지대공미사일 포대(20대 SA-2, 5대 SA-3, 5대 SA-6  
& SA-9)

아. 공대지 미사일: AS-7, AS-9, AT-2, AT-6

자. 공대공 미사일: AA-2 Atoll, AIM-9 Sidewinder

#### 6. 준군사부대

가. 중앙보안조직: 20,000명

나. 부족징병: 최소 20,000명

세관당국 6척의 연안용 쾌속정 보유

#### 7. 외국군대: 약간의 러시아 군사고문

자료: *The Military Balance 1993-1994*, IISS, London, October 1993,  
p. 133.

## 예멘 내전관련 주요일지

1992.6.1 ~ 1994.5.9

- 92. 6. 1 알비드부통령, 총선을 앞두고 살레대통령과의 협력을 거부, 아덴으로 거처를 옮김
- 92. 8 아부바크르 빈하이눈 석유광물자원부 장관(남예멘), 석유개발정책에 대한 의견충돌로 살레대통령에 사의표시후, 아덴으로 귀향
- 92. 12 살레대통령, 총선후 계속 연정보장으로 알비드부통령과의 불화해소
- 93. 4.27 총선결과, 예멘개혁당(회교 부족)의 제2당 부상으로 복수정당정치 개막
- 93. 5 보다 많은 각료배당을 요구하는 개혁당과 개혁당의 대통령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는 社會黨간의 대립으로, 3당간의 조각교섭 공전계속
- 93. 6 개혁당에 대한 6명 각료배당으로 거국내각을 가까스로 성립
- 93. 8 알비드부통령, 사전양해 없이 고어 美부통령과 회담한 문제를 계기로, 살레와의 알력이 재연되어 아덴으로 다시 복귀
- 93.10.10 알비드부통령, 야당대표단에게 다음 대통령위원으로 불출마 선언
- 93.10.11 국회의장(개혁당 공동대표 아흐마르), 10.14 법정시한전에 대통령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안건을 본회의에 상정, 5명의 대통령위원을 선출케 함(법정시한이 경과하면 국회의장이 자동적으로 대통령서리직을 맡게 됨)
- 93.11.27 살렘 무하멧대통령위원(남예멘社會黨 부서기장)은 현위기의 타개책으로서 연방제를 제의
- 93.12.29 알아따스총리(남예멘계) 신년예산안 국회제출을 방치한채, 아덴에서 계속 체류
- 94. 1.10 살레대통령, 타이즈, 호데이다, 입브등 주요도시 군중집회에서 알비드부통령의 비협조 규탄
- 94. 1.11 바센와 외무장관, 난국타개 돌파구로 대사우디 관계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
- 94. 1.18 범정당 정치권대화위원회, 정치개혁안을 채택
- 94. 1.19 메퀴드 아랍연맹 사무총장, 예멘의 소말리아화 가능성을 경고

- 94. 2.20 요르단왕 중재로 살레－알비드 회동에서 화해, 정치개혁협정에 합의, 귀로 알비드부통령 사우디 경유 아덴으로 돌아옴
- 94. 2.15 알비드부통령 외지와 회견에서 연방제 제의
- 94. 2.16 國民會議黨 소속 남부의 알마르주 정치보위국 국장과 알베이다주 보안사관에 대한 암살기도에 이어 社會黨이 아덴상주 북예멘에 고관의 철거 강요
- 94. 2.16 살레대통령,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회견에서 암만회동을 통해 현안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함
- 94. 2.28 남측 국방부 대변인, 북측 기계화 제2사단이 2.26 남측 보병 제5여단 기지를 중화기로 공격했다고 주장
- 94. 4.27 사나서 북부 60km 합동군사기지에서 남측 33기갑 여단과 북측 ~28 제1 기갑 여단간의 충돌로, 최소 800명 사망, 탱크 85대 파손
- 94. 4.28 마키 제1부총리 사나에서 피격, 국회의장 사저 부근 폭탄차량 폭발
- 94. 4.29 社會黨, 내전발발 위험성 경고하고 북측군이 여러곳에 병력배치 주장
- 94. 4.30 북측 국방부 발표: 충돌로 2개 기갑여단이 파괴, 200여명이 사망
- 94. 5. 1 살레대통령 전투중지 명령
- 94. 5. 4 다마르시에서 로켓포, 대포, 탱크등이 동원된 전투 재발
- 94. 5. 5 양측 군용기 사나와 아덴을 서로 공격. 살레대통령, 비상사태 선포
- 94. 5. 6 남측의 휴전제의, 북측이 거절. 사나 대통령궁 미사일 공격으로 소각
- 94. 5. 7 북측, 남측에 투항요구하고 아랍연맹의 중재 제의 배격
- 94. 5. 9 남측저항으로 양측군 소강상태
- 94. 5.11 북측 살레대통령, 남측에 대해 헌법준수의 조건부로 휴전 제의. 한편 아랍연맹은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재단을 예멘에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

## Ⅱ. 綜合討論

빈 면

# 綜 合 討 論

## 〈 토 론 〉

- 사회자: 유세희 (한양대 교수)
- 토론자: 구종서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홍순남 (한국외국어대 교수)  
박준영 (중앙일보 통일부장)  
권영진 (통일원 통일정책실 보좌관)

사회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우선 구종서 선생님께서 두분의 발표에 대해 토론해 주십시오.

구종서: 오늘 두분의 발표는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유익한 정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김국신 박사께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출발해서 통일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다루어 주셨고 현지대사를 역임하신 유지호 선생님께서는 예멘의 국내 정치·사회적 배경에서 오는 통일의 문제점을 학문적 분석을 곁들여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월남이라든지 남북한 관계, 중국, 독일 등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 조금 벗어난 중동, 특히 예멘의 경우는 신문지상의 보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오늘 두 선생님의 논문을 접하고 나서야 예멘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멘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나 시사점은 무엇이며 우리의 통일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오늘 이 학술모임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멘통일의 특징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예멘통일은 평화통일입니다. 둘째 상처됐던 정치세력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통일입니다. 셋째 그 통일방식은 협상에 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결과를 1對1 즉, 균등하고 평등하게 나누어 갖는 통일방식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기존의 통일방식과 다른 점들입니다. 예멘통일에 선행하는 통일방식으로는 베트남식과 독일식이 있습니다. 베트남식은 군사적 무력통일이었고 그건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적인 흡수통일이죠. 독일식은 평화적인 흡수통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식과 독일식의 공통점은 어느 일방의 우세한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통일을 이룩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군사적 힘으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적으로 한 것 뿐입니다. 예멘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우세한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등한 협상에 의한 통일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예멘의 통일방식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에서 다시 군사적 충돌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역시 독일식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식 통일의 특징은 우선 국민의사에 의한 통일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국민은 동독 국민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에 적용한다면 북한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남한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통일을 남북한에 대입하자면 북한 주민의 의

사가 김일성의 의사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호네커의 뜻과는 아무 관계 없이 동독 기층인민들의 주권적 선택과 그 선택이 서독에 의해 받아들여진 경우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월한 체제, 효율적인 체제, 성공한 체제가 열등한 체제, 비효율적인 체제, 실패한 체제를 흡수한 것입니다. 서독의 체제는 국민들에게 정치적 자유,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보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희망을 제공했기에 성공적 체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동독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의 경우, 남한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북한은 완전히 실패한 경우지요. 물론 우리의 성공 정도가 독일만큼은 안 되지만 말입니다. 세번째는 우월체제의 담당세력 즉, 서독의 지배층의 역할입니다. 서독의 지배층이 통일된 지배체제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남한의 경우도 남한의 주체세력이 통일한국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남한의 방식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통일한국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정부의 통일 정책기조는 단계적 통일, 협상에 의한 통일, 즉 예멘식 통일입니다. 저는 공식적인 통일정책은 예멘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통일정책은 독일식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소위 북조선기지를 내세우 듯이 우리는 민족통일, 우리 민족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남한기지론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봅니다. 남한기지론은 전 남한이 본부가 되어 남한 엘리트의 주관하에 남한의 체제를 연장·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북한을 평화적으로 흡수통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사력이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군사력이



꼭 전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할 때 그 힘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군사적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오면 군사력을 배경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힘의 우월성은 군사력의 뒷받침 없이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국가 대 국가, 이질체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독일식 통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우리와 독일과의 차이점을 근거로 독일식 통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현상은 자연과학적 현상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비록 독일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더라도 통일방식은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현상에서는 다른 원인이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한 원인이라도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과 우리의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독일식 상황을 우리가 조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통일정책을 독일식 즉, 통일직전의 동독의 상황이 북한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류와 접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류와 접촉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남한은 개방체제이기 때문에 접촉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북한은 폐쇄체제이기 때문에 개방과 접촉에 있어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저는 핵과 통일정책의 연계를 반대합니다. 핵은 핵대로 국제협조체제로 북한에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남북과의 대화와 경제교류를 줄이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핵은 핵대로 계속 밀고 나가되 접촉과 교류와 대화는 극대

화 하면 할 수록 북한의 동독적 상황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고 우리의 체제를 보존하는 통일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멘식 통일은 평화적인 통일방식 중 협상에 의한 대등한 1對1의 권력분점이 얼마나 환상적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나라 역사를 보면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때 백제를 무력으로 흡수하였습니다. 신라는 평화적인 흡수통일이었습니다. 우월한 힘에 의해서 하나는 군사적으로 흡수했고 또 하나는 평화적으로 흡수했습니다. 19세기 프러시아의 통일을 군사적 통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무력통일은 아니었습니다. 통일의 환경을 조성할 때는 무력을 사용했지만 독일통일 자체는 평화적인 통일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물론 프러시아의 월등히 우세한 힘이 그 바탕이었지만 말입니다. 프러시아는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막강했습니다. 그 힘을 배경으로 프러시아는 36개 연방을 흡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회만 오면 우리의 힘을 바탕으로 일방적 흡수통일을 할 수 있게끔 우선 경제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해서 통일의 기회가 올 때 북한이 남한의 체제를 선택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동독사람들이 기회가 왔을 때 서독체제를 선택했듯이 말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순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홍순남: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계의 역사상 많은 통일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권력투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는 나라에서는 다시 재분열이 일어났고,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치엘리트나 군엘리트나 이익집단이 숙청되거나 배제된 지역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종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은 힘에 입각한 흡수통일 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이스라엘의 대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2,000년전의 성서를 근거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영토권을 주장한다면 미국지역에서 인디언이 다시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만주 지역을 한국이 고구려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 이스라엘 대사는 “오랜 역사속에서 민족이 존재한 것은 힘 때문이다. 그것이 정신력이든, 군사력이든, 문화력이든, 경제력이든 말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합의통일이란 갈등, 화합, 다시 갈등을 통한 재교육의 오랜 역사시간 속에서 이룩된 통일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기간동안에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양쪽의 이질적인 요소가 공존의식을 느끼게 되지요. 세계의 역사속에서 종교분쟁이 그 한 예였습니다. 구교와 신교가 120년만에 공존할 수 있게 되었지요. 동서 이데올로기의 대립도 70년의 투쟁 끝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런 의식구조가 재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양쪽 환경에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간에 통일이라는 이슈가 발생되면 필연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의 흐름속에서 언젠가는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지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쪽 지역

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경개념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느 면에서는 국경개념이 없습니다. 중국영토내에 있는 백두산에서 물을 마시고 와서 우리는 북한의 백두산을 갔다온 걸로 착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남북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반쪽의 환상과 착각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통일이 안 된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속에서는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그렇게 믿고, 언젠가는 우리의 노력으로 통일을 이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근대국가 개념의 국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중동지역의 후진국을 들여다 보면 오관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사막 한쪽 귀퉁이에 바위 하나로 국경표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석유가 나오면 곧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오아시스에서 물이 나와 어느 한 유목민족이나, 한 부족이 양떼를 끌고 와서 정착하게 되면 사우디, 예멘, 오만 등의 주민간에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이 지역의 도시는 전부 자급자족할 수 있고 독립된 경제권을 이루고 있는 병영화된 도시입니다. 즉, 병영화된 부족 거주지인 셈이죠. 일종의 중국의 군벌 세력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세력들 중 의지할 수 있는 세력이 나타나면 이합집산 현상을 보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요르단을 가면 외국에 갔다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과거 오스만 제국을 대신할 국제정치·사회적 틀이 바로 아랍연맹이었습니다. 국제정치적 환경이 발달하면서 아랍연맹 내의 조그마한 세력들이 전부 국가라는 모습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투리 땅이 발생하고 이들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간의 갈등과 분쟁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예멘의 문제도 중심부 세력간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변세력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우리나라 처럼 분단된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예멘은 아덴 지역을 하나의 전략기지로 갖고 인도의 곡식창고를 지키려는 영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소위 분단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예멘의 북부지역의 부족들은 종파와 관계없이 사우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현재의 북예멘의 중앙정부세력에 필요할 때는 협력세력으로, 이권에 맞지 않을 때는 반정부세력으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소는 남예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예멘조차도 중심부 아덴의 정치세력 이외의 세력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멘 자체를 볼 때는 통합된 중심세력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예멘이 통일문제를 위한 협정을 맺을 때마다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경분쟁으로 또다시 군사적 충돌을 해결하려다 통일로 협상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멘통일은 시초부터 정치지도자들의 합의였지 진정한 통일을 위한 합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멘국민은 아직도 천년간의 과거역사에서 시바왕국이라든지 또는 힘아라이드 왕국을 민족적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영광을 회복하려는 통일의식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의식이 민족의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국민의식

과 국민감정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통일정책은 전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어떤 優性的인 요소가 흡수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층이 있는 한 이러한 통일은 절대 달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양쪽의 요소가 공존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현재 미국은 예멘내전이 제2의 엄청난 지역분쟁을 일으켜서 주변 강대국들을 또다시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내정불간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통일의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안하재다고 하면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역사를 되돌아 보면 불가침조약을 맺으면 꼭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 다발지역이라는 표지가 있는 곳에서 항상 똑같은 사고가 유발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속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은 우리 스스로 조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영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박준영: 중앙일보의 박준영입니다. 저는 매일 북한 핵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멘문제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대단히 불행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었던가를 생각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주로 구종서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북한과의 통일문제에서 어떤 접근을 시사받을 수 있는가를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국신 박사께서 접근하신 게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멘과 남북한과는 여러가지로 같은 점보다는 차이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공통점을 보기보다는 과연 나눠져있는 남북한과 예멘이 어떻게 다른가에 포커스를 둔게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지만, 예멘 통일협상과정의 시사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첫째 사람이나 조직이나 국가에 있어 절대 고정된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예가 있으면 그 다음 행위자는 절대 거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북한을 보더라도 우리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제의를 하면 북한이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만,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은 이미 독일로 부터도 많은 교훈을 얻었고, 따라서 개방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바로 앞서의 한 예가 그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시사점이 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국가간의 관계라든가 모든 사회를 생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반응이나 자극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응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김박사님의 논문에서는 예멘이 우리와 같은 점들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바, 남북예멘사이에 외세가 존재했다는 사실, 통일과정에서 정치권력자들이 통일문제를 정치에 이용했다는 점등이 우리와 거의 같은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으로서 남북한이나 예

멘에서 살고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같은 것은 아주 다릅니다. 북한은 굉장히 폐쇄적인 체제이지만, 남예멘과는 다른 상당히 근대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멘은 중앙정부가 지배했던 국가형태로서의 한 통일된 국가지배체제가 이뤄졌던 역사가 굉장히 짧지만, 우리는 통일신라 이후에 중앙정부가 상당히 통일된 어떤 권력을 행사해온 국가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근대국가와 남예멘같은 국가 차이가 뭐냐, 제일 먼저 그 나라 체제가 얼마만큼 민주화가 되어 있느냐, 국민들 의식이 얼마나 근대화 되어 있느냐, 또 경제적인 수준을 비롯해서 산업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하는 점에서 구분해본다면 저희들과 예멘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국민들이 통일을 바라고 수용할 자세가 얼마나 되어있느냐 하는 것은 중앙정부를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느냐와 함께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예멘에서 저희가 얻을 교훈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능한한 모델을 찾아야 한다면 조금전에 구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일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일은 국가의 형태라든가 국가의 발전단계, 경제적인 수준 등의 측면에서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화 과정 혹은 국민화의 수준에서 우리는 독일에 훨씬 뒤져있지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과거 정치권력자들이 통일문제를 정치에 과도하게 이용함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통일에 대한 접근방법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



서 국민들이 통일을 과연 남의 일이 아니고 자신의 일로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을 했을때 남들만 부담을 하는게 아니고 내가 얼마큼 희생할 몫이 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을 해서라도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같은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의 우리정부나 우리가 취했던 통일정책을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단선적인 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강경한 통일론만이 아주 바람직한 통일론으로 인식되고 조금이라도 유연하게 접근을 하려고하는 통일론에 대해서는 반국가적이라든가 혹은 특히 북한에 대해서 동조적인 시각이라고 치부되는데,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북한은 말로는 통일을 하자는 얘기를 하면서도 점차 꼬리를 빼가는 느낌인데, 그것은 체제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지배하는 체제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집권자나 마찬가지인데, 체제가 무너질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북한이 남한과 합의해서 통일을 하겠다고 나올 것이라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독일의 예를 보았고 지금은 예멘의 예를 볼 수도 있는 바, 이를 통하여 과거보다 훨씬 많은 지혜를 얻게된 북한사람들에게 우리가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바로 단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북한에 접근하고 있고 정말 민족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접근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얼마전 예를 들어보면 특사교환 얘기를 가지고 상호 공방을 하다가 결국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서로 양쪽이 주고받은 전통문을 보면 북한이 잘못했다고

언론 입장에서는 쓰지만,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면 오십보 백보입니다. 북한이 어떤 이유로 트집을 잡아서 다음에 이렇게 하자하고 나오면 저희가 대응하는게 북한과 별로 다를게 없습니다. 이러하고 저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못하겠다는 식의 북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한 남북한의 집권자나 국민의식도 제가 볼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월한 체제에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정신적인 혹은 민족문제를 다루는 의식수준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원에서 발행하는 특사교환에 관한 관련자료를 꼭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용하는 명분같은 것이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북한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같은 단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쌀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줄 필요도 있고, 돈이 없어서 기름을 못사고 있다면 그 돈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올해 기름값을 5,000만불 주었다고 가정해 보면, 내년에 북한은 틀림없이 5,000만달러를 한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짤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는 다음 해에 8,000만달러나 1억달러를 줘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 해 1억달러가 북한예산에 잡힐 것인데, 이는 바로 북한의 예산 그리고 나아가서는 경제구조가 점차 우리한테 예측되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경제적으로 예측시킬 수 있기 때문에 5,000만달러를 주겠다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구박사 말씀대로 바로 실패하는 길이죠. 우리가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이 어느 정도 잘 살아야 통일 후

에도 문제가 없다는게 독일 통일의 교훈입니다. 저는 우선 유연한 접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고정관념같은 것을 버려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희같은 사람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과연 통일문제를 접근하는데 과거와 같은 교조적인 접근방법이 계속 유효할 것인지 오늘 반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진 보좌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진: 통일원 정책실의 권영진입니다. 사실 저는 예멘문제 전문가가 아니고, 통일원 통일정책실에서 통일정책을 연구, 개발하면서 과연 저희들과 같이 분단되었다가 다시 통일을 실현한 국가들의 통일사례가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뤄나가는데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측면들을 연구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분단국의 통일사례들은 조금전에 구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3가지 인데, 이 3가지를 하나 하나 보면서 상당히 一喜一悲 한다는 점이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평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저희들은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였었고, 그러다가 또 독일식과 같은 흡수통일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 5월 22일 예멘이 통일되자, 합의에 의한 통일이라고들 하면서, 거기에도 상당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합의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다는 예멘이 내전으로 민족적인 대재앙

을 겪으면서, 이 합의통일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사회에서 독일이나 예멘의 통일경험을 보면서 제기되고 있는 논의, 즉 흡수통일과 합의통일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우리가 택해야 한다고 하는 논의에는 반대합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을 흡수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흡수통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두가지 부분을 나누어보아야 하는데, 결과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떠한 체제가 중심이 되고 우위적인 형태로 통일이 되었는가 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과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통일이 되었는가 하는 과정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봐야하는데, 예멘이나 독일같은 경우 둘 다 결과로서는 흡수통일입니다. 예멘도 북예멘의 시장경제체제와 민주공화제가 중심적인 체제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멘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결과로서는 합의통일이나 대등통일이 아니라 흡수통일이고, 다만 권력만 분점했을 뿐입니다. 권력의 분점이 통일의 형태를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예멘과 독일은 엄연하게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독일같은 경우는 동독의 몰락과 서독에 의한 흡수 합병이기 때문에 분명히 흡수통일이지만, 그러나 예멘은 새로운 헌법에 합의해서 그 새로운 헌법에 근거해서 통일을 이루어나갔기 때문에 합의통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통일되기 이전 단계에서 흡수통일이다, 합의통일이다 라는 식의 논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반문해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흡수통일을 피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흡수통일을 의

도한다고 해서 흡수통일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제기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흡수통일을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흡수통일의 상황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또한 우리가 흡수통일을 하겠다고 했을때 과연 흡수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러한 흡수통일과 합의통일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우리가 택한다고 했을때, 이것은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 때로는 남북관계의 경색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를 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도에서 분단국의 통일사례를 보는 우리들의 잣대와 방법, 접근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을 해나가는 과정과 통일 이후의 국면들을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 국가와 민간,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역할관계를 중심으로 분단국의 통일과정을 구분하고 유형화 하고, 그러한 유형들이 갖는 한계와 긍정적인 측면들을 바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독일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주도형 통일이라고 구분해보고 싶은데, 다시 말하면 국가는 통합과정에서 제도적인 boundary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72년도 기본관계조약, 그 이전에 있었던 통행협정, 이런 형태의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고 실제로 통합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서독과 동독에서의 민간부문입니다. 수없는 자매결연, 교류 같은 것들이 통일을 실제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독일통일을 보면서 독일은 통일조약이 없다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72년도 기본관계조약도 통일관계조약이라기 보다는 공정관계를 형성하는 공정조약입니다. 심하게 표현해서 분단고착화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 만큼 독일이 국가

주도적으로 통일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나갔던 측면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의 경우는 시민사회주도형 통일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독일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주도형의 통일논의 과정은 이를테면 시민사회 자정능력을 통해서 국가영역에서의 갈등을 자율적으로 흡수하고 통제하면서 통일에 따른 후유증들을 폭발적으로 표출시키지 않고 적절히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욕구가 그대로 정치권으로 반영이 되면서 급격히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히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통일후유증은 큰 것입니다. 그것이 통일비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번째 예멘의 경우는 국가주도형 통일로 보고 싶습니다. 예멘통일의 전 과정을 예멘의 양측 정부가 주도했고, 민간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통일되는 방식도 경제·사회통합이 먼저되고 그 다음에 정치통합, 국가통합으로 이어지지만, 예멘의 경우는 양측 지도부가 국가통합, 정치통합에 대해 합의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과도기간 속에서 경제·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일시적인 후유증은 적을 수 있습니다. 김국신 박사께서 예멘통일 이후의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만 그 많은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직접적인 통일의 후유증이라고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라크, 쿠웨이트 전쟁에서의 외교적인 판단 미스가 불러오는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 등인데, 이런 부분들은 통일이후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통일후유증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급격하게 이루어

졌던 독일식의 통합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통일 후유증은 예멘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주도형의, 정치주도형의 통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정치권과 국가영역에 있어서의 갈등을 시민사회가 통제할 능력이 없었고, 그 갈등은 곧 바로 폭발적인 지금과 같은 내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엄청난 민족적인 재앙을 낳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을 해보았을때 예멘의 통일, 독일의 통일은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예멘과 독일의 통일과는 접근방식이나 이해방법을 달리하는 측면에서의 우리의 통일방법론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를테면 혼합형의 통일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틀과 통일과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담당해가고, 그리고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 자율적인 통합의 주체들은 민간이 해나가도록 제도적 보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일방안들, 정부의 3단계통일방안을 포함해서 대체로 통일방안들에 있어 합의되는 것으로 “평화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여겨 집니다. 다만 지금 그러한 통일방안들, 통일논의들의 중심 자체가 자칫 국가중심, 정치중심으로 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북관계와 같이 긴장국면이 계속 극대화되는 상황속에서는 정치중심으로 가면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통합과 교류협력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단계에서는 핵문제

로 인한 긴장이 너무 고조되어있기 때문에 구박사께서는 핵-경협의 연계정책을 애초부터 풀려고 하지만 저는 풀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핵국면이 어느정도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차원의,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시민사회연대를 만들어내는 교류와 협력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두분께 한가지씩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국신 박사께서는 예멘통일의 시사점을 말하면서 합의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인권문제 등 통일원칙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을 가진 협상, 이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다만 이것의 전제는 당장에 실천되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사항 자체를 경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자칫하면 합의파괴의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김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철저히 지금 당장 실천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무용성과 실천되지 않는 점에 초조해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부터 실천해나가고 그것을 촉구해 나가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유대사님은 금번 예멘내전의 원인을 분석하시면서 복수정당제가 통일예멘의 재분단의 위기를 오히려 조장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현상적인 측면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사님께서 보시기에 예멘통일과정에서 일당제의 가능성이 있었는가?, 과연 일당제로 해서 과도기를 거쳤을때 그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되었



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분의 토론 가운데 나온 질문과 특히 코멘트 가운데 발표자 두분과 다른 견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하여 먼저 발표자 두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신: 흡수통일이나 합의통일이나로 논의가 귀착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기되었습니다만 문제해결 방식 또한 어떤 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해결방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첫째 예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홍순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적 특성이 우리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델로 삼아서 배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멘통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일식 통일을 상정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 입장을 밝히자면 예멘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합의통일은 사실상 굉장히 힘든 문제이며 남북예멘과 남북한의 차이를 비교하여 볼 때 남북한이 합의에 의하여 통일을 이루기는 예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교훈은 남북한 관계가 합의통일이 아니라 흡수통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독일통일에서 배울 수 없는 점을 시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은 독일통일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독일식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환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기술적이나 행정적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멘을 공부하면서 느낀 바로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한다고 하여도 기술적,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정치적 문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흡수통일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평화나 안정된 사회를 보장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예멘 통일에서 시사를 받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멘의 경우를 볼 때 합의통일은 아주 힘들 것이고 흡수통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하여 어떠한 협상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예멘의 합의가 주는 교훈은 상호불신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합의를 해보아야 결국은 공허한 말뿐이고 그러한 관계에서 이해대립이 발생하면 합의서라는 것은 일시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대하여 어떠한 협상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준영부장님께서 제기하신 학습효과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분명히 학습효과는 있습니다. 예멘의 경우를 보고 남북한이 모두 피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망한 것은 러시아가 망한 원인과 비슷하게 집권층의 권력독점을 해체하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소련지식인들이 앞에서 과거의 모든 경험을 다 피해나간다고 하지만 결국 그 트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학습효과라는 것이 동일한 사람이 한번 실수를 하고 동일한 실수를 피해나갈 수는 있지만 남의 실수를 보고 내자신이 그러한 실수를 피해나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멘을 볼 때 어떠한 면에서 예멘교훈은 동양고전에서 혹은 서양고전에서 나

오는 논리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한나라에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왕이 둘이 있을 수 없고 두 군대가 한땅에 설 수 없다는 강한 논리가 왕조시대부터 유지되어 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은 예멘에서 다시 밝혀진 셈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마키아벨리가 무력으로 정복한 국가는 통치하기가 쉽지만 합의로 이룩한 평화는 쉽게 깨진다고 말한 것이 또다시 예멘사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의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고 남의 실수를 보고 배울 수 있는 학습효과라는 것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못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호: 지금 권보좌관계서 독일통일은 시민사회주도형 통일이고 예멘의 경우는 국가주도형 통일로 본 시각은 저에게도 상당히 공명이 가는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예멘의 통일에 있어서 권보좌관의 분류를 따른다고 한다면 국가주도형으로 협상이 되고 주도가 되었지만, 이것이 민간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과도기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복수정당제가 됩니다만 그때에 부족세력, 회교세력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부가 권유한 것이 아니라 남북예멘의 정치세력이 연정이 되니까 결국은 복수정당제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남북예멘의 통일을 반대하던 이 세력들이 정당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하나의 교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지어 예멘에서 복수정당이 그 후에 여러가지 정치적인 갈등구조를 심화시켰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일당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둘을 합쳐버리면 한당이 되는데 만약 한당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독재정권으로 통합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 다만 남예멘과 북예멘의 정치세력은 배경과 배후에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일당으로 통합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장시간에 걸쳐 본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플로어에서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발표되고 토론된 고견들은 연구원이 앞으로 통일정책을 연구, 개발하는데 크게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附錄〉會議日程

- 13:30~14:00   登 錄
- 14:00~14:05   開 會 辭：李秉龍(民族統一研究院 院長)
- 14:05~14:45   主 題 發 表
  - 司 會：柳世熙(漢陽大 教授)
  - 發 表：金國新(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예멘統一方式이 한반도 統一에 주는 示唆點  
柳志鎬(前 예멘駐在大使)  
“예멘統一 이후 問題點  
－ 政治·軍事 문제점을 중심으로”
- 14:45~15:00   Coffee Break
- 15:00~16:30   討 論：具宗書(三星經濟研究所 常務)  
洪淳男(韓國外國語大 教授)  
朴峻瑩(中央日報 統一部長)  
權泳臻(統一院 統一政策室 補佐官)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和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Ⅲ)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 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

## 예멘 統一의 問題點

세미나시리즈 94-03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5,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5月 日

發行日 1994年 5月 日

---